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10/ 30 통권 1699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신규사업자 세금 길라잡이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기업 리스크 원천에 대한 실무적 이해
-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금영수증관련 절세방법
- 신규사업자 세금 길라잡이
- 자주 실수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사례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경우는 배당소득에 해당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 戰略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원천징수세율과 거주자 소득세율 비교〉

개념, 구분	국내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세율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 판단	국내 주소, 연단위 국내거소 183일 이상	국내 주소 없거나, 국내거소 183일 미만자
납세의무범위	국내 + 해외의 전 소득 합산과세	국내원천소득만 과세(조세조약에 따름)
이자소득	일반 금융이자의 15.4% + 종합과세	일반이자소득의 22% 분리과세
국가등채권	일반이자소득의 15.4% + 종합과세	채권이자소득의 15.4% 분리과세
비영업대금	비영업이자소득 × 27.5%, 종합과세	일반이자소득의 22% 분리과세
배당소득	일반배당소득의 15.4% + 종합과세	일반배당소득의 22% 분리과세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지급액의 3.3% + 종합과세합산	인적용역소득의 22% 분리과세
사용료소득	법정경비 60% 후 순소득 40% × 20% × 1.1 = 8.8%	사용료 지급액의 22% 분리과세
특허권소득	법정경비 60% 후 순소득 40% × 20% × 1.1 = 8.8%	특허보상액의 16.5% 분리과세
부동산양도소득	양도차익×기본세율 적용	지급액의 11% ≤ 양도차익의 22%
유가증권양도	금융투자수익×22%(과세유예중)	지급액의 11% ≤ 양도차익의 22%
근로소득	근로소득순액×기본세율 적용	인적용역소득간주×22% 분리과세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99호 / 주간 44호

2024. 10. 30.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원천징수 세율과 거주자 소득세율 비교	표지
CEO의 경영 산책	기업 리스크 원천에 대한 실무적 이해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회계프로그램 제품 자산등록 시 비용 구분 - 사내복지기금 - 법인 주택매각 부가가치세 대상 - 자기주식 문의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금영수증관련 절세방법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22대 국회 주요 입법현안 및 과제	9 10
직장인 Survival	협상시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은 부동산 소득 내지 부동산양도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해 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함 (서면법규국조-2527, 2024.04.29)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 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사전법규법인-23, 2024.04.26)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 인하율 20%→15%로 축소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수동적 동 업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경우는 배당소득에 해당됨	13
세무정보	- 자주 실수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사례 - 신규사업자세금 길라잡이	15 25
노무정보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47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 정환율	48

기업 리스크 원천에 대한 실무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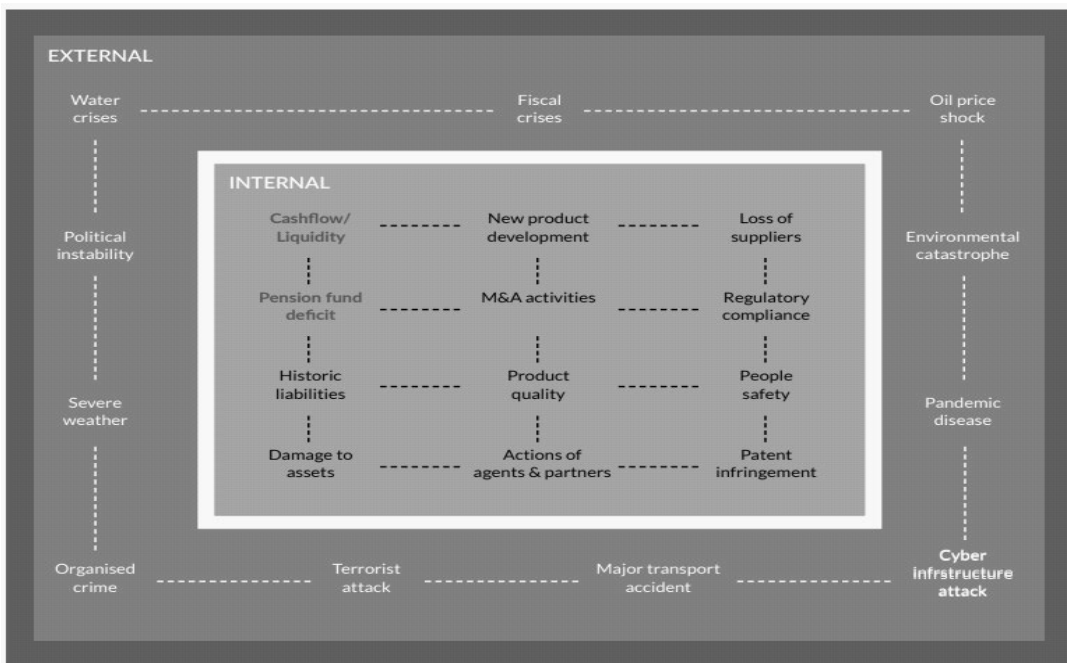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서는 리스크의 원천 (sources)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각 기업마다 경영환경이 상이하므로 리스크 원천은 다양하다. 리스크 원천을 크게 내부원천과 외부원천, 그리고 내외부 원천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리스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영국 Airmic (the Association of Insurance and Risk Managers in Industry and Commerce) 리스크 내외부 원천을 <그림1>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그림1: 내부와 외부 리스크 원천

■ 외부원천리스크

외부 원천 리스크는 기업의 물 부족 (예 : 가뭄으로 여수산단의 공업용수 부족), 정치적 불안정 (예 : 미얀마 군부 정권), 아르헨티나 재정위기,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과 수산업 피해, 오일 쇼크, 테러와 사이버 인프라 공격 등이 예이다.

외부 원천 리스크 요인의 대표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이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은 리스크의 중요한 외부 원천에 해당한다. 다른 외부 원천에 의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전략리스크에 속하는 ‘경쟁’이 있다. 자기 회사가 지금까지 시장 우위를 점하던 제품이 갑자기 나타난 경쟁자에게 시장을 뺏기며 몰락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최근 반도체 1위 기업이었던 인텔의 추락이 사례일 수 있다. 최근에 부각되는 외부 원천 리스크는 환경 및 재난과 관련된 리스크이다. 환경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공해, 오염물질 배출이나 산업재해에 더욱 민감해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청된다.

■ 내부원천리스크

내부 원천은 조직 내부에서 발원한 리스크이다. 우선 재무리스크에 해당하는 유동성리스크가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용이 부적절하여 은행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거나 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직원의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의 사건이 유동성리스크에 해당된다. 재무관리 담당임원(CFO)는 이러한 유동성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자금 조달과 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내부 원천은 회계정보와 관련한 운영리스크이다. 회계장부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거나 자금 횡령이나 자금 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해외 수주를 위한 사전 원가정보에 오류가 있어 실제적 프로젝트 수주의 손실을 보는 경우이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확산과 하이브리드 인프라 및 클라우드 도입의 가속화로 IT 환경이 분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 사이버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IT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resiliency)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내외부원천에의한리스크

내·외부 원천에 기인한 리스크도 많다. 대표적으로 사후 서비스업무와 관련한 리스크이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품질 불량이나 A/S에 대한 고객의 불만 등이다. 때로는 블랙컨슈머와 같은 악의적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리스크도 적지 않다. 글로벌로 Value Chain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직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시되고 있다.

상기한 리스크 원천을 요약하여 예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2〉 리스크 원천 : 예시



회계프로그램 제품 자산등록 시 비용 구분

Q 1년 이상인 유무형의 자산은 자산으로 등록해야함은 확인 하였는데,
자산등록 시
- 새 제품 상세 견적에 라이선스 300만원 + 교육비 200만원 으로 되어있다면,
300만원으로 자산등록을 하고, 교육비 200만원은 자산등록을 안하고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
하는것이 맞을까요?
견적서에 구분이 되어있어 자산, 비용도 구분을 해야 할 지 의문입니다.

A 각각 독립된 항목이라면 구분하여 자산, 비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내복지기금

Q 사내복지기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해년 순익의 몇%로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예 연말에 총당금으로 설정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사내복지기금 지급액은 총당금으로 설정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 주택매각 부가가치세 대상

Q 저희는 법인으로 기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는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하러 합니다.

(*) 매각 부동산 대상

가. 기존 임대자산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나. 전용면적 : 69.68m²

다. 매수인 :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예정

라. 시세차이로 매각이익 발생

1. 부가가치세 대상여부

- 국민주택규모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서 배제된다고 알고있는데 과세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문의 드립니다.
- 매수인이 인수한 오피스텔을 사용목적(사업용으로 사용, 주거용으로 사용)에 따라 부가세 환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 법인세 신고 납부 시 시세차익에 대한 초과분에 이율의 적용하여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신 부탁 드립니다.

A

1. 귀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주거용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2.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가 과세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경우만 추가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자기주식 문의

Q

자기주식이 계속 마이너스 부인상태인데 직원들 우선주 주식인수해서라면, 자기주식을 결국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대로 부의상태로 놔둬도 되는지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다른 거래가 있으면 해당 거래로 처리하면 되나, 특별한 거래가 없는 상태면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금영수증관련 절세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금액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법정증빙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에 반영시킴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잘못 발급받아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알아두면 좋을 현금영수증관련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코드번호 010-000-1234를 기억하자

현금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을 때 마땅히 불러야 할 번호가 생각나지 않거나, 회식이라도 하고 현금 결제할 때 누구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 등은 우선 코드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010-000-1234는 국세청이 지정한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용 번호인데, 이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등록이 되는 한편, 신청인 명의를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따라서 가맹점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지참한 사람이 회사나 집으로 돌아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사명이나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을 등록 하게 되면, 등록한 명의로 현금 결제 내역이 등록된다.

010-000-1234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회사명이나 소비자 개인명의로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려면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법인이나 개인으로 로그인하고, ②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메뉴에 있는 '자진발급분사업자등록' 메뉴를 클릭한 뒤, ③ 거래금액과 010-000-1234로 발행된 현금영

수증의 승인번호·거래일자를 입력하여 조회한 후, 등록하면 된다. 새롭게 등록된 내용은 2~3일 후에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 방법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있어 개인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법인이나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출증빙 및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줄 방법이 있으니 바로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이다.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이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법정지출증빙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후, 조회/발급 메뉴 중 현금영수증수정 메뉴의 하위메뉴인 사업자용 용도변경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① 변경전 자료조회 화면에서 용도변경 기간을 참고하여 조회기간을 선택(용도변경 기간을 경과한 거래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정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별도 연락), ② “조회하기” 버튼 클릭, ③ 용도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단위 : 리터당 원)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023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	2024년 7월 1일 ~ 10월 31일	2024년 11월 1일 ~ 12월 31일
휘발유	820	615(-205)	656(-164)	698(-122)
경유	581	369(-212)	407(-174)	448(-133)
액화석유가스 (LPG) 부탄	203	130(-73)	142(-61)	156(-47)



금융투자소득세·증권거래세·대주주 요건 개정 추이

세법 개정연도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세율	대주주 요건(시행령)
2020년 12월	2023년 시행으로 신설	0.10%에서 단계적 인 하 : 2021년 0.08% → 2023년 0.05%	
2022년 12월	시행시기 2년 유예한 2025년으로 연기	2024년 0.03% → 2025년 0%	
2023년 12월			대주주 요건 10억 → 50억원 완화



22대 국회 주요 입법현안 및 과제

입법 현안	주요 과제
1.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반도체산업 특별법안) 첨단산업 지원기반 확대 및 기금조성(첨단산업 기금법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인공지능 특별법안) 첨단산업 세제지원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개정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형벌 강화
2.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간 전력망 지원체계 구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 지원(해상풍력 특별법안)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합리화(신재생에너지법) 수소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수소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절차·책무 규정(고준위특별법안)
3.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상증세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당은 상속세 공제액 상향 발의 입법영향분석 도입(국회법 개정안) 등
4.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활동 지원(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합리적 개선(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주택 무상취득·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및 부가되는 세금의 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원시취득 상속취득	85㎡ 이하	2.8%	-	0.16%	2.96%
	85㎡초과	2.8%	0.2%	0.16%	3.16%
증여취득	85㎡이하	3.5%	-	0.3%	3.8%
	85㎡초과	3.5%	0.2%	0.3%	4.0%



협상시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협상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며 대화를 잘 이끌어간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협상을 많이 해보면 된다. 운동경기처럼 꾸준히 훈련을 쌓으면 누구라도 협상을 잘할 수 있다.

단,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사가 심부름을 시킨 다거나 어떤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낸 다음,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리더를 맡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청해 봐도 좋다. 상사가 그것을 승낙해 줄지 말지는 별개이지만 일단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비칠 테니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경험을 쌓고 훈련을 해나가면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먼저 토론을 전개하면 논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속내를 상대방에게 들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먼저 하고 싶을 만큼 말하게 만들고, 그 동안 그의 논리에 따라 천천히 반론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바바라 베르크한도 같은 조언을 하고 있다. 곧바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다. 그리고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모두 나왔을 때쯤 그 근거를 하나씩 파헤치라는 것이다.

최신판례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경우는 배당소득에 해당됨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
가 동업기업으로부터 투자목적회사를 통
해 얻은 부동산소득 내지 부동산양도소득
을 원천으로 하여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함**

서면법규구조-2527, 2024.04.29

■ 질 의

- 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음
- 갑법인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 또는 양도 등에 따른 소득을 배당으로 지급받고 있음
- 동업기업인 갑법인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상 수동적동업자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갑법인은 2023년 과세연도 종료일에 배분 대상 배분금액을 동업자들에게 배분할 예정임

질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은 부동산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소득 구분

■ 회 신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 목적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로서 투자 목적회사가 투자 대상 부동산에서 얻은 부동산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배당으로 지급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 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 제6항 제2호 나목 전단 또는 같은 항 제4호 나목 전단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
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
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사전법규법인-808, 2023.12.06

■ 질 의

- 본건 합병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에 해당함으로써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 회 신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에 따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후단의 경우로 한정)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사전법규법인-23, 2024.04.26

질 의

- 질의법인은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공장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질의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04.22.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과세대상인 경우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법규부가-891, 2024.04.25

질 의

-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 신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서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어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우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 인하율 20%→15%로 축소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간 연장된다. 정부는 다만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축소돼 리터(ℓ)당 약 40원 인상될 예정이다.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역시 각각 30%에서 23%로 인하 폭이 줄어든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물가 동향과 세수 감소 등의 재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이 각각 인하된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의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은석 "상증세 신고비용,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8일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기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위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하고 신고수수료, 주식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반면 양도세는 신고서

나 계약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면서 "세목 간 형평성 제고와 갈수록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작성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성실납세를 위한 직접비용은 당연히 공제되어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국민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과 수증자가 실제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될 수 없는 세무신고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최은석 의원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쳐진다면 부담한 국민부담도 줄이고 국민이 수긍하는 세금 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관세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악용 방지"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증가하는 마약 밀수 등 부정유통 거래를 확인하는 데 가상자산 계좌 조회가 더욱 수월해 질 전망이다.

24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에 포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그간 불법 가상거래 계좌를 추적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컸으나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추가돼 과세자료 확보가 수월해 질 전망이다.

최은석 의원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자주 실수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사례

- 국세청, 2024. 10

사례 1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 세법설명

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됨.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0% 세율 적용

☒ 신고 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세율을 적용



사례 2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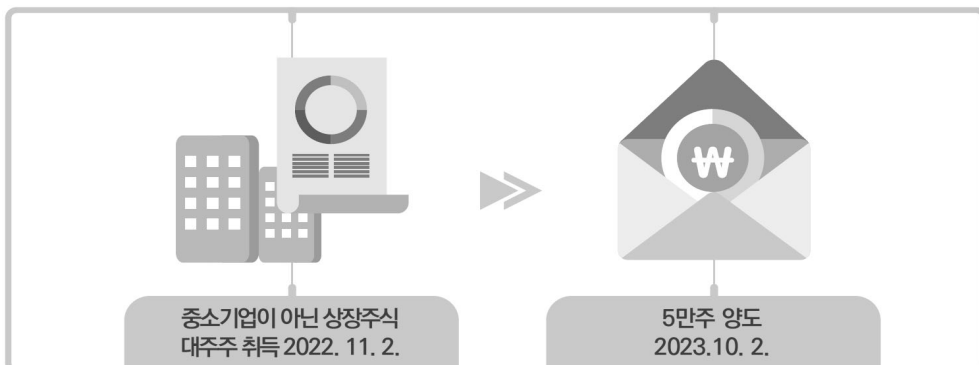
△△씨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소액주주 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주주 세율(20%, 3억 원 초과 25%)이 적용됨에 따라 가산세 4천만원을 포함, 양도소득세 2억 8천만 원 추가납부

• 세법설명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 10% 세율이 아닌 20 ~ 25%의 누진세율을 적용

☒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사례 3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주식 A의 대주주로 2022년 11월 2일에 취득한 A주식을 2023년 10월 2일에 5만주 양도하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 세법설명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 적용

-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

사례 4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된 사례



● 실수사례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신고하여 가산세 등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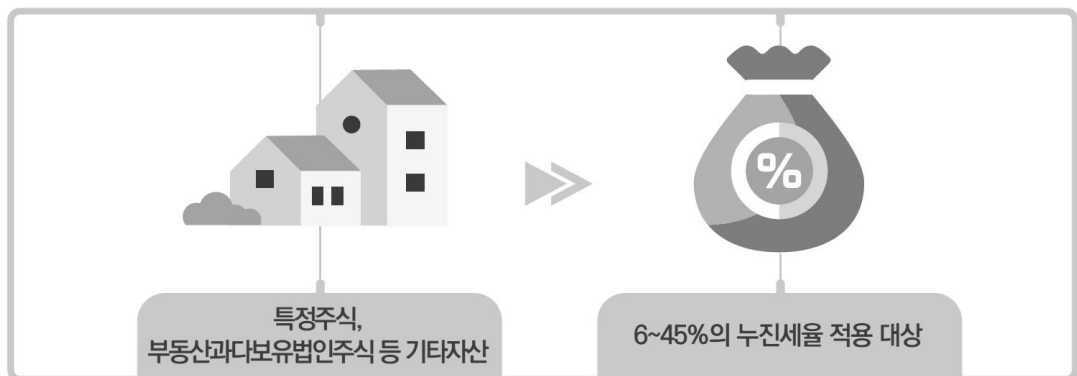
• 세법설명

'23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3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연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 및 누진세율 적용 확인

사례 5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일반 누진세율(6~45%) 적용대상 특정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일반주식 양도 차익에 적용되는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8억 원 포함, 양도소득세 47억 원 추가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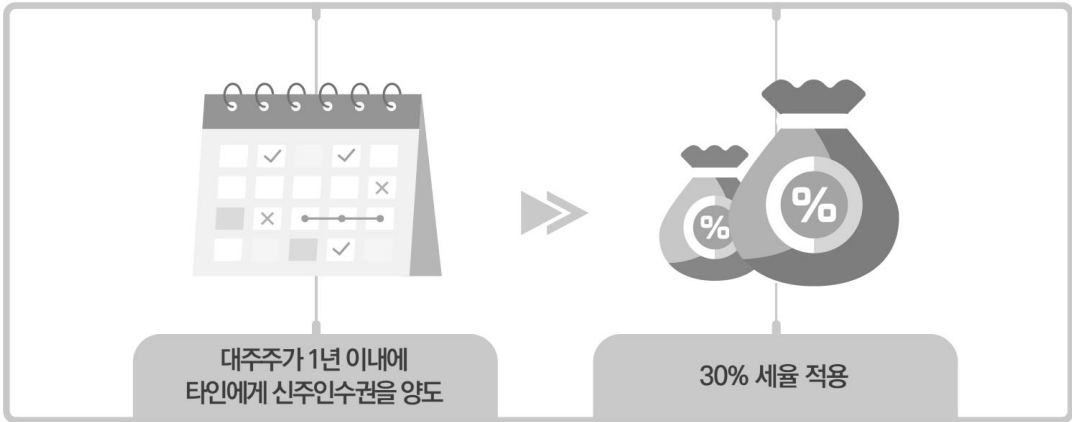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

• 세법설명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6~45%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 ☒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 여부를 사전에 확인

사례 6 신주인수권 단기 양도 후 단기 양도세율(30%) 미적용 사례



● 실수사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취득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 후 일반 세율(20%)을 적용하여 신고

• 세법설명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의 경우 주식등(신주인수권 포함)을 취득 후 단기(1년 미만 보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 적용

☒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짧아 단기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

사례 7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주식등의 양도시점에는 이혼함에 따라,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미이행

• 세법설명

최대주주 판정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

사례 8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 실수사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무신고

• 세법설명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해당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

사례 9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 실수사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 주식 체결일을 기준으로 잘못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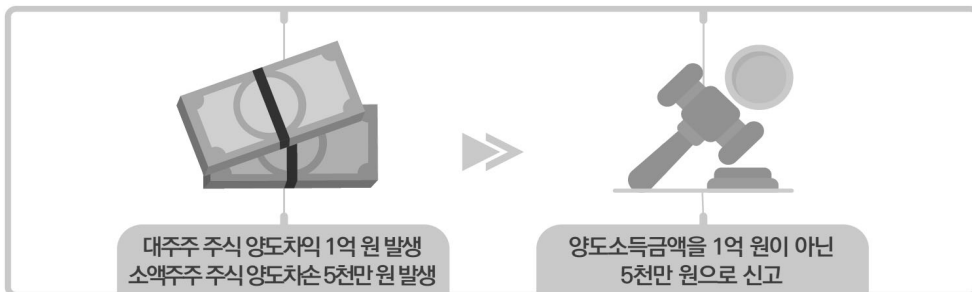
• 세법설명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

☑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여부 확인

사례 10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A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해당 주식을 장내 매도하여 차익이 1억 원 발생하였고, 같은기간 B상장주식(□□씨는 소액주주 해당)을 장내 매도하여 5천만 원 손실이 발생. 예정신고 시 A주식과 B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5천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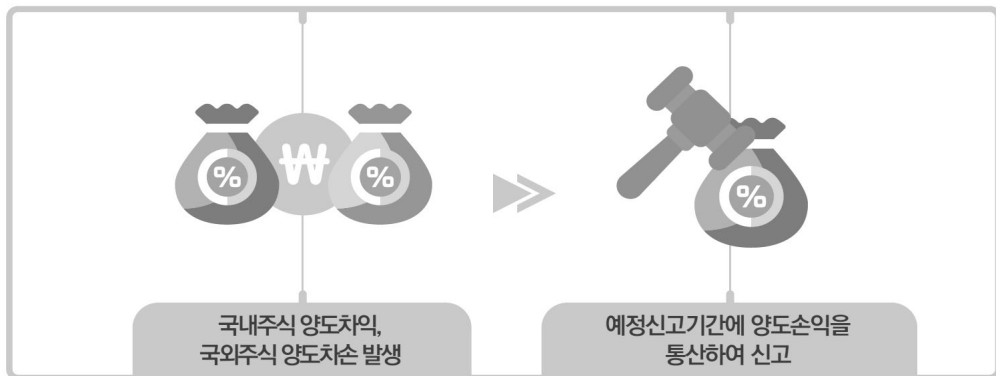
• 세법설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 가능

- ☒ ①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②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

사례 11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 실수사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3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자 예정신고기간(8월)에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등 추징

• 세법설명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 시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차손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임

- ☒ 국외주식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만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

사례 12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 실수사례

세율이 낮은 주식 양도차손을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등 추정

• 세법설명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손익을 통산

☒ 세율이 다른 양도손익이 있는 경우 손익통산의 순서를 유의

사례 13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23. 1. 주식 매도건에 대하여 '23. 8. 예정신고 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



용하여 신고한 후, '23. 9. 매도건에 대하여 '24.2. 예정신고 시에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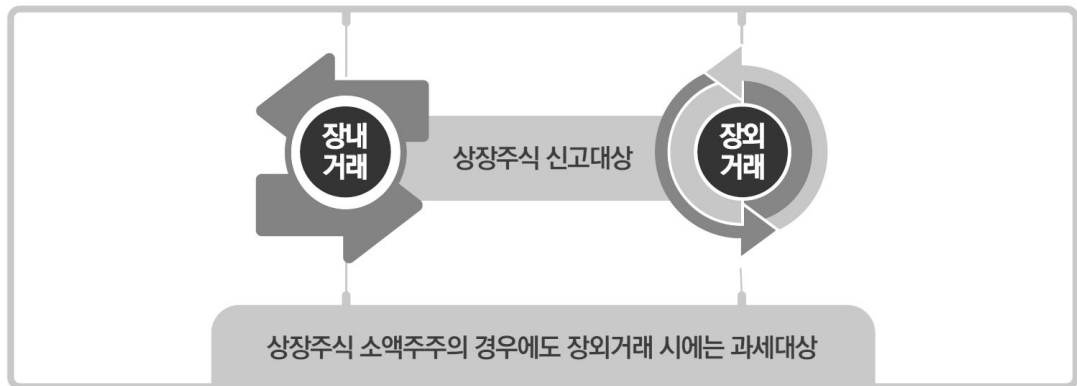
• 세법설명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이므로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없음

- ☒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각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 한도로만 적용되는 점에 유의

사례 14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 실수사례

○○은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후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주식등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9백만 원을 포함, 양도소득세 4천만 원 추가납부

• 세법설명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

- ☒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장내, 장외 양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

신규사업자 세금 길라잡이

- 국세청, 2024. 10

1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

-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분류



1)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법령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의무는 면제됨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및 의무이행방법	
일반 과세자	1기	1.1. ~ 6.30.	4.1. ~ 4.25.	세무서장이 작년 제2기 납부세액의 1/2만큼 예정 고지*
			7.1. ~ 7.25.	1.1. ~ 6.30. 사업실적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며 예 정고지액 차감
	2기	7.1. ~ 12.31.	10.1. ~ 10.25.	세무서장이 올해 제1기 납부세액의 1/2만큼 예정 고지*
			다음해 1.1. ~ 1.25.	7.1. ~ 12.31.사업실적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며 예 정고지액 차감
간이 과세자	1.1. ~ 12.31.		7.1. ~ 7.25.	세무서장이 전년도 납부세액 1/2 예정부과*
			다음해 1.1. ~ 1.25.	1.1. ~ 12.31.사업실적에 대하여 확정신고·납부하며 예정부과액 차감

* 징수해야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1월·7월에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
일 반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 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 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1기	1.1. ~ 3.31. 실적	4.1. ~ 4.25.
		2기	7.1. ~ 9.30. 실적	10.1. ~ 10.25.
간 이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 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 가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신고의무 부여)	1.1. ~ 6.30. 실적		7.1. ~ 7.25.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신고·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
정고지)
-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
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 지연 시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6장 가산세 부과·감면 참고)

● 세금계산서 제도

-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는 아래의 확인사항 및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 확인사항	필수 기재사항
① 거래당사자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여부)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과세유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 여부)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 사업자등록 상태·과세유형 조회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사업자상태 조회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③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④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예시 : 접대목적의 골프회원권 사용, 특정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매출할인한 것 등)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급 기간
모든 법인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 연도 7.1.부터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한 사업자(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참고)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착오·과실 발급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허위발급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과다기재 발급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가공발급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공급받은 사업자		
허위수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과다기재 수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가공수취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그 공급가액의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그 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그 공급가액의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그 공급가액의 0.3%

사업장현황신고
<p>사업장현황신고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대상자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p>사업장현황신고 기간·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검토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③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과·면세 경영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 가능)
가산세액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지식 Plus+

1.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

- 홈택스로 국세*를 신고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원천세, 교육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했거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 방문없이 납부 관련 정보를 확인 후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2. 국세 납부방법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홈(손)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에서 전자신고분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분은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납부가능(카드 수수료 0) ○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07:00~23:30 	금융기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운영시간 내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ATM 사용 시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인터넷 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 (www.giro.or.kr) [국고금]-[국세]에서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납부가능(카드 수수료 O)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00:30~23:30 	금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금수납기란,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카드 로 텍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 (www.cardrotax.or.kr) [국세]에서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복합결제방식으로 납부가능(카드 수수료 O)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00:30~23:30 	세 무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인수납기) 신용·체크카드(카드 수수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체크카드 납부 전용 무인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이용시간은 09:00~18:00(토요일·공휴일 제외)

3. 전자고지 제도 안내

- 전자고지란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제도이며, 홈택스·손택스 [납부·고지·환급]-[국세고지]-[전자고지 신청/해지]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이용 납세자는 대상세목에 대하여 국세 고지서 1건 당 1,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세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공제시기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공제

4. 전자고지 유의사항

- 전자고지서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송되며, 전자고지 발송 시 별도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고지서의 송달효력은 홈택스·손택스에 저장된 때 발생하며 열람기준이 아닙니다.
 - 전자고지서를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전자고지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자동 해지되고, 해지 다음날부터 종이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30일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전자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전자고지 열람으로 간주합니다.



2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

- 1.1.~12.31.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5·6월에 신고·납부)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이며, 분리와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하는 방법은 ①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기장신고)과 ②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추계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장신고한 사업자는 기록한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31.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장부기장 시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고('09~'19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① 기장신고	② 추계신고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이 기록된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하는 방법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전문직 외의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또는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기준경비율 대상 ◦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면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경비율 판단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경비율 판단 기준금액에 미달한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

- 업종별로 적용되는 복식부기 및 기준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홈택스에서기준·단순경비율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도움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업종 구분		복식부기 기준수입금 액	기준경비율	기준수입금액
			직전연도	당해연도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6천만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천6백만원	1억5천만원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7천 5백만원	2천 4백만원	7천 5백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가구 내 고용활동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① 무신고가산세와 ②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①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0.14%) 중 큰 금액

②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 신규 개업한 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소득
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전세금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신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신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세율: 6~45%)

주택임대소득 관련 가산세

-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2020년 귀속분부터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 임대 수입금액 0.2%가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을 무·과소신고하거나 신고 후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 Plus+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여받은 포인트(10만원 당 1p)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구 분	내 용
①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납세담보 면제(개인·법인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최대 9개월간 납세유예 신청 가능 ※ 담보면제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원
②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법인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 이하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 -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최대 1년간 매각유예 신청 가능 ※ 매각유예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원
③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 핑몰(개인·법인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구매금액에 따라 세금포인트 1~5p 사용
④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방문 시 비즈니스센터 이용 ※ 세금포인트 5p 사용
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할인 ※ 세금포인트 1p 사용
⑥ 국립세종 · 백두대간수목원 관람료 할인(개인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세종·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람료 1천원 할인 ※ 세금포인트 1p 사용
⑦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 세금포인트 3p 사용
⑧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법인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이용 ※ 세금포인트 22~49p 사용
⑨ 국립생태원 · 해양생물자원관관람료 할인(개인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 1천원 할인 ※ 세금포인트 1p 사용
⑩ 경주시 사적지 관람료 할인(개인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시 사적지 등 10곳 관람료 1천원 할인 ※ 세금포인트 1p 사용
⑪ 행복한 백화점(개인·법인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구매금액에 따라 세금포인트 1~5p 사용



3 현금영수증 및 사업용계좌 제도

● 현금영수증 제도 안내

-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자 및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의무 대상자		가입기한
개인 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의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가입의무 대상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미가입기간 일수로 안분하여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가맹점 스티커를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장(천장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불이익 ※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81조의10,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75조의8 참고	
현금영수증을 위장(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2(3)%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와 건별 5천원 중 큰 금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2018.12.31. 이전 위반분은 50%)

● 사업용계좌 제도 안내

-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전용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신고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사업용 계좌 관련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 1. 1. ~ 6. 30. ◦ 변경·추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① 미신고 가산세 : $\text{MAX}(\text{㉠미신고한 기간의 수입금액} \times 0.2\%, \text{㉡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times 0.2\%)$ *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과세기간의 거래금액 ②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 \times 0.2% *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금액 중 미사용분에 한함 ③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128④)

-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전용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신고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법인 대표자 명의로 된 계좌도 차명계좌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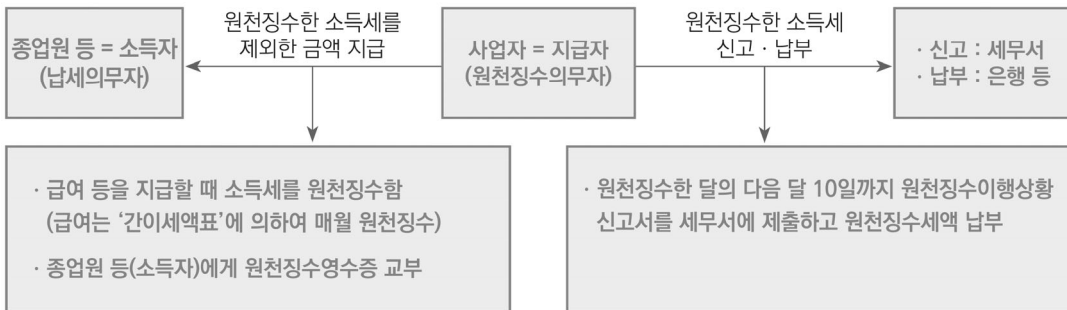


4 원천징수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사업자는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급여, 사업·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이자·배당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봉급·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 사업자는 일정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인 지급명세서를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 종류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구분	제출 시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¹⁾ 의 지급명세서	지급일 ²⁾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사업 ¹⁾ ·근로·퇴직·종교인소득, 봉사료의 지급명세서	지급일 ²⁾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26.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강연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1)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 제외),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제출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2) 소법§131, §135, §144의5, §147을 적용받는 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관련 주요 가산세대상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장 가산세 부과·감면 참고)
- 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외)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1%를,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근로소득은 3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0.1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지급명세서(일용지급명세서 제외)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원천징수 반기별 신고·납부

- 반기별 신고·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제외), 종교단체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
 - *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 수(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 수)로 하며,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 신청 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전연도 12.1. ~ 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 ~ 6.3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 방문 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제출



5 가산세 부과·감면(공통)

● 가산세 부과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일반)	
원칙	무신고납부세액 × 20%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7/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무신고 가산세 (부정)	
원칙	무신고납부세액 × 40%*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② 수입금액 × 14/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②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60%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는 경우 납부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일반)	
원칙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②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과소신고·초과한금 가산세 (부정)	
원칙 [①+②]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과소신고납부세액 등.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②)+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 14/10,000 ③ (과소신고납부세액 등.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②+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과소신고납부세액 등.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③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60%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22%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일수
②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22% ×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일수
③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3%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Min (①,②)	①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 3% +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22/100,000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부분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세 감면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차등하여 가산세를 감면합니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가산세 감면 제외)

내용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9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1년6개월 이내		2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도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 그 날 현재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 효력
 - 대항요건(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대상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등기여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에 한하여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지역 구분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100)

○ 확정일자 신청 방법

- 확정일자 신청서(사업자등록 신청·정정신고와 동시 신청 가능)와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건물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신청 불가능)

● 임대차 정보 제공

○ 임대차 정보제공이란?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임대인 동의 필요)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와 증빙 서류 안내

이해관계인	증빙 서류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계약서 등 해당 상가건물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 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 확인(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가 직접적으로 적힌 판결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임대인의 동의서 및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등

○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단, 도면 제공 요청서는 상가건물 관할 세무서에서만 접수·처리 가능합니다.

7 납세자권익24

● 「납세자권익24」안내대상

- 「납세자권익24」는 납세자가 권익보호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여러 채널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납세자 권익보호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권리 헌장, 국세행정서비스헌장 등 소개 ○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권리구제/ 불복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불복(과적/이의/심사)·국선대리인 신청
성실납세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포인트·모범납세자 제도 소개 ○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세금지원/ 상담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소리(VOC), 영세납세지원단 서비스 신청, 인터넷 상담 신청, 세법 해석 신청, 방문 상담 예약, 공감소통·민생지원소통추진단 소개
심의사례/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주요 심의 사례, 심의 사례 검색, 발간 보고서/책자, 세무 서식

지식 Plus+

발급창구	이용방법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회원가입·로그인(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신청/신고]에서 국세증명 신청 및 발급
정부24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및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로그인(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하여 국세증명 신청 및 발급 - 국세증명 16종 및 사실증명 2종(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어디서나 민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청 및 발급 - 국세증명 16종 및 사실증명 2종(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무인민원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13종) 신청·발급 - (본인인증) 주민번호 입력 후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확인 - (설치장소)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정부24(www.gov.kr) → 고객센터 → 이용안내 → 무인민원 발급 안내



8 세무 상담

● 전화 상담 안내상

- 국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상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탈세신고는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1 현금영수증	2 전자세금 계산서	3 신고·납부	4 학자금상환	5 연말정산 간소화	6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7 증명발급 및 일반 세무서류	9 ARS 비밀번호 등록
2. 세법상담							
3.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4. 탈세 등 각종 제보							

● 홈택스 상담 안내

- 홈택스·손택스의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상담하기]-[상담도우미]에서 세목별·주제별로 자주 묻는 질의응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추가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상담하기]-[인터넷 상담하기/모바일 상담하기]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 납세자 세법 교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세금 신고·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 관련 도움을 드리고자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대상	. 신규사업자 등 세법교실 수강을 희망하는 납세자
참가신청	.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taxstudy.nts.go.kr/taxedu).참가신청 ※ 참가신청은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교육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별도 공지되는 세부일정 및 수강신청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2024. 10

정부는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참 고

직업소개사업 개요

- (정의)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 직업소개를 하면서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무료 직업소개사업과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분류됨
- (법적 근거)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 및 제19조(유료직업소개)
 - 직업소개사업은 소개 대상인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직업소개사업과 국외직업소개사업으로 분류
 - 신고 및 등록 관청

구 분		현 행	개정안
국내 직업소개사업	유료 (등록)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무료 (신고)		
국외 직업소개사업	유료 (등록)	고용노동부	
	무료 (신고)		

□ 등록요건

- 인적 요건(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 등) 및 물적 요건(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5천만원) 충족 필요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18일 (금)	10월 21일 (월)	10월 22일 (화)	10월 23일 (수)	10월 24일 (목)
미 달 러 (USD)	1366.50	1371.10	1370.40	1380.10	1382.00
일 본 엔 (JPY)	909.64	916.91	909.08	913.55	904.86
영 국 파 운 드 (GBP)	1778.16	1789.90	1778.98	1791.85	1784.09
캐 나 다 달 러 (CAD)	990.40	993.51	990.50	998.73	998.45
홍 콩 달 러 (HKD)	175.79	176.45	176.29	177.57	177.87
위 안 화 (CNH)	191.64	192.32	192.51	193.46	193.54
유 로 화 (EUR)	1479.71	1490.18	1482.16	1490.30	1490.00
호 주 달 러 (AUD)	915.01	920.63	911.80	922.25	916.61
싱 가 폴 달 러 (SGD)	1039.40	1046.52	1040.70	1048.47	1044.28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17.05	318.53	318.44	318.88	317.70